

다산포럼

말의 배제와 민주주의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원체 모호한 글을 즐겨 쓰는 편인데다 남달리 강렬한 주장을 할 땅에,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글 때문에 주목받은 기억은 별로 없다. 그런데 드물게도 편집자로부터 초고의 특정 단어를 교체해줄 것을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부탁받은 일이 두어 번 있다.

그 한 번은 참여정부시절, 관영매체에 쓰는 글에서 지금의 대통령을 '유신 공주'라 칭했을 때였다. 흥미롭게도 정장을 요구한 것은 '공주'님의 수하가 아니라(글이 발표되기 전이나 당연하다), 그 반대편인 매체 측이었다. 말인즉, 가뜩이나 좌파니 뭐니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실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뭐, 내 글의 본질적 부분도 아니었던 데다

가, 무엇보다도 글이 실린 횟수에 따라 원고료를 사후정산(!)하는 시스템이었으므로 선선히 고치기로 했다.

다른 한 번은 식민지시대 문인 이효석이 낙엽 태우는 냄새를 커피 향에 비유한 것을 두고, 도대체 그 시절 커피 볶는 냄새를 일상의 각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조선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는가, 뭔지 모를 '반동'의 기운을 느낀다고 썼을 때였다. 편집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얼핏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실은 '조선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조선 '인민'이라고 써야 했다가 그만두었을 뿐 '반동'이 그토록 무서운(!) 단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사회과학 저작을 많이 읽어야 하는 직업 탓에, 역사발전이나 시대정신을 거스른다는 의미에서 '반동적(reactionary)'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곤혹스러워하는 편집자의 설명을 들다 보니 잊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113 수사본부' 때위의 제목이 붙은 반공 드라마에서 간첩들은 누군가를 공격할 때면 예외없이 딱딱 끊어지는 스타카로 발성으로 '반동'이라 불렀던 것이다.

'좌경행동주의'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그 발화자(말한 이)가 갈데

없는 '좌빨'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받아들여 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진중권은 이를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고 했고, 하태경은 냉소적으로 반박했다. 그러자 "너는 고작 주체사상이나 믿었었나"는 반박과 "김일성 만세를 부를 정도로 주사파는 아니었다"는 재반박이 이어진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 북한 용어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라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일까? 보수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주사파는 아니었음만 입증하면 되는 것, 혹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종북과 마르크스주의, 무식한 주사파와 세련된(?) 주사파의 경계, 그 경계가 말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거꾸로 말이 그 경계를 규정하는가?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는 "오늘날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관리되는 방식에 맞서는 행동의 연구자들은 그 자체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된다."라고 말했다.

십여 년 전 갑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맞장 토론을 벌이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를 좋아했던 이들도, 싫어했던 이들도, 그 라이브함에 관해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비웃는다. 그저 조용히 몇 명 자름으로 써 침묵의 시그널을 보냈더라면 검사를 따위야 알아서 기었을 테니 적어도 퇴임하자마자 겸활에 불려다니는 수모는 겪지 않았을 거라고. 그가 결여했던 것은 다른 아닌 마키아벨리즘이었고, 권력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특정인에 대한 호오와 상관없이 정치적 리얼리즘을 바탕에 두고 있는 주장인 셈이다. 이러한 리얼리즘은 곧 그래서 결코 권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혹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이어진다.

적을, 그러므로 적의 언어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 현실, 그럼에도 민주주의란 그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말의 확장에 다른 아니라는 이론. 이 현실과 이론 사이에서, 결국엔 어느 한 쪽에 줄서도록 강요받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나는 솔직히 나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정교하게 관리되는 말의 체계에 갇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역사발전에 흑여 무슨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인간해방이나 민족의 승리보다는 말의 해방에 있을 것임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로 발전하려면



임영임
성균관여성유도회 전라남도본부 회장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구태에 얹매여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보니 국민의 대다수는 정치에 등을 돌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의 사람들만 정치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 중 정치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인식상정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마음 깊숙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가 되기를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 정치에 많은 불신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 없

으니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주위의 깨어있는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니라고 하시며, 정치하는 사람

들이 국민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의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우리 국

민이 깨어있지 못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이고 이대로 놔두면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바쁜 시각으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연, 학연, 지연 거기에서 지역감정까지 얹혀서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민주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선거를 지금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꾼들의 지역감정 싸움에 이용만 당했을 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하는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한다. 그것이 확실한 민주주의다. 일하지 않는 정치꾼들이 발불이지 못하게 하고 국민과 지역민의 대변인이 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 정치에 많은 불신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 없

국민이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투표에도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협연·학연·지연과 지역감정 등 모든 악습은 버려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기를 꿈꾸며 바른 민주주의의 정체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양고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혁파와 국익을 위한 정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감정을 막는 정치꾼들에게 속지 말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정치를 바꾸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귀한 밀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되었으면 한다.

만약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해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지 못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치는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민주당으로 국민은 선택권은 뒷전이었다.

당의 명령이면 어쩔 수 없이 나의 권리가

아닌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어주는 선거를 했었다.

그뿐인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역과 국민 앞에 대변인과 심부름꾼을 하겠다고 선거철이면 호언장담을 해놓고서 당선되면 그 지역의 황제가 되기 일쑤였다. 민생을 돌아보고 그 지역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해 놓고서는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배부름을 채우는 것도 개인의 영달도 아니다. 이 지역 호남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호남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외를 당하고 살았는지 생각할 때다. 지역난후와 인재양성의 소외·차별 등을 당하고 살 때 이 지역의 대표하는 정당은 무엇을 했는지 또한 물고 싶다.

어려움이 닥치면 광주 전남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말만 번지르게 하고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본인들의 영달에만 관심을 갖는 선거꾼들은 은 이제 주방시켜야 한다. 또 광주와 전남을 소외시키고 낙후시키는 슬픈 현실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社說

일부 지자체 선거 겨냥 선심성 지원하다니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종교단체의 노인대학에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선심성 예산' 논란을 놓고 있다. 노인대학의 강의가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가 강사로 나서는 등 종교 채택이 강한데도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일선 시·군이 92곳의 노인대학에 11억3000여 만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받은 노인대학의 절반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신안군의 경우 지난해 7곳에 2억40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5년간 8억8000여 만 원을 지원해왔다. 신안군은 올해도 2억8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도 같은 기간 10곳에 2000만 원을 지원해줬고, 예산 지원을 받은 곳 중 종교단체가 아닌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또한 무안군은 12곳에 7200만 원을, 함평군도 9곳에 9300여 만 원을 지

원했다고 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를 노인대학은 종교인이 강사로 나서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성경교실' 등 종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 교육 전파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절저히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종교단체 노인대학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단체장 선거를 거냥한 특정 종교단체의 '환심 사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공평한 예산집행은 자치 행정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 훼손되면 자치의 미래는 없다. 시·군의회는 물론 상급기관이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남도 등 감독기관은 종교단체 노인대학 지원에 대한 감사 실시,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 스스로 주민 혈세가 쌈짓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다.

정부, 판로 막힌 AI지역 가금류 수매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닭·오리의 판로가 막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조치로 농가들이 출하 시기를 놓치면서 사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축산물의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AI 발병농가로부터 반경 3km 내 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으며, 반경 3~10km 내 농가의 가금류는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살처분 시 산란계와 육용오리는 일정액의 보상비가 주어지지만 이동에 제한을 받는 농가들은 이로 인해 저평가로 혈세를 끌어들이고 있어 사육농가의 초토화는 물론 축산업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AI 발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당장 수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거 4차례 AI가 발생했을 때 3차례 수매한 바 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도 적극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無等鼓

"한국에서 만든 전자제품에 불량이 생기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육을 먹듯이, 나 또한 한국이 만들어낸 사람이나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12승을 거둔 박찬호는 자서전 '글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에서 리그에 있는 동안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녔다고 솔직했다.

영화 '국가대표'의 실제 모델었던 강칠구·김현기·최홍철 등이 10일 열린 스키점프 노멀힐(K-95) 개인전에서 결선 최종

라운드에 오르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약은 선수층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갈채를 받을만 하다. 4년 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비인기종목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유망선수 육성과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국가대표들을 우리는 '태극전사'라고 일컫는다. '스포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71명(남자 41·여자 30명)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NGO 칼럼

'시간제 일자리'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노동정책으로 삼정하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겠다고 한데 이어, 지난 4월 6개 부처 합동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성고용률이 증가해야만 고용률 70%가

달성되는 것은 맞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고 여성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여성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가 남성대비 18배나 급속히 증가했지만 여성고용률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준 전일제 일자리가 시간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3월 기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75만 명이며, 이중 73.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에 재입장할 경우 갖게 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시간제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시간제노동은 저임금, 짧은 근속기간, 기업규모의 영세성 등 질 나쁜 일자리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악질화가 전제되었을 때만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자리 질의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정책은 불완전 고용증대정책으로 시간제 노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노동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보호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최저임금 현실화다. 시간제 노동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최저임금이 곧 시간제 노동의 시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였다.

둘째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이 적용 확대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노동의 44.6%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고 시간제 노동의 25%가 1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제도의 적용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문제